

##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_32문항\_모범답안]

출제분야 : 당헌당규 / 영역 : 당 기구의 기능 및 특징 비교

### 1. 정답 ④ (4점)

상임전국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④는 “겸할 수 있다” 고 하는 내용은 규정과 배치된다.

①은 상임전국위원회의 구성(100인 이내)과 유권해석 기능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②는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③은 전국위원회 의장의 선출 방식과 겸직 관계를 기본서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8~14.

출제분야 : 당헌당규 / 영역 :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과 추인

### 2. 정답 ④ (4점)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당헌 제93조).

①은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유권해석과 당헌 개정의 추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②는 최고위원회의의 당무 심의·의결 기능을 당헌 개정 추인 권한과 혼동하고 있다.

③은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지만 당헌에 의거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11.

출제분야 : 당헌당규 / 영역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 3. 정답 ③ (4점)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5조제1항제8호에 명시된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이다.

①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추천과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을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②에서 읍·면·동 운영위원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것이며, 읍·면·동별 유권자 수가 당해 당원협의회 읍·면·동별 평균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인 경우 그 배수 이내에서 3인까지 선임이 가능하다.

④에서 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존재하며, 광역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15~16.

출제분야 : 당헌당규 / 영역 :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4. 정답 ③ (4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등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고 이상의 징계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징계처분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

- ①은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잘못 기술하고 있다.
- ②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 등이 이루어지나 잘못 기술하고 있다.
- ④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의 취소 및 정지가 가능하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21.

출제분야 :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 영역 :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

5. 정답 ③ (3점)

토지개혁법은 1949년 제정 및 일부 개정등을 거쳐 1950년 시행되었고, 1950년 4월 15일 70~80%의 토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갖게 되어 6·25 전쟁 초기 북한 공산당의 토지분배 선동이 실패했다.

- ① 토지개혁은 전쟁 발발 전인 4월에 7~80%의 토지가 분배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 ②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6월부터 법 통과 이전에 이미 행정 준비를 독려했다.
- ④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는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으로, 유상몰수·유상분배가 아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29~30.

출제분야 :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 영역 : 이승만 정부의 주요업적

6. 정답 ④ (3점)

④의 이승만 대통령은 의무교육 시행 등과 같은 교육정책을 펼쳤으나,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부의 수준이 동일하고 평등하게 사는 체제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음.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체제임

- ①은 이승만의 인민공화국 주석 취임 거부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설립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 ②는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상황을 기본서와 일치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③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경위와 발효 시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24~31.

출제분야 :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 영역 : 박정희 정부의 주요 업적과 성공요인

7. 정답 ① (3점)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저축 권장과 고금리 정책을 통해 절약·저축 풍토를 정착시켜 경제성장의 자본을 마련했다.

- ②에서 같은 기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5%였으며, 대한민국은 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③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이 아닌 철강,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과 수출주도 경제로 방향을 설정했다.
- ④에서 박정희 정부 당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곳은 일본이 아닌 서독이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32~33.

출제분야 :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 영역 : 김영삼 정부의 주요 업적

8. 정답 ④ (3점)

④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은 1955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①은 김영삼 정부의 노동개혁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②는 임기 중 경제 실적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를 기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은 문민정부의 탄생과 김영삼 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본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적시하고 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36.

출제분야 : 헌법 / 영역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한

9. 정답 ④ (3점)

① ○ : 헌법 제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 :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특정 지역 출입 제한 조치가 이와 긴장 관계에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장기간 지정되거나 요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③ ○ :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고 단순 의견 개진이나 비판에 대해 지나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른다면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도 충돌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④ ×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40~42.

출제분야 : 헌법 / 영역 : 국회의 권한

10. 정답 ① (3점)

① × :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 :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 :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지만 최종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

④ ○ : 행정부는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 수 있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와 상위 법률에 부합해야 함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43~44.

출제분야 : 헌법 / 영역 : 대통령의 주요 권한

11. 정답 ④ (3점)

① ×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② × : 대통령은 재직 중 수사·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③ × :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 : 헌법 제79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46~47.

출제분야 : 헌법 / 영역 :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기능

12. 정답 ② (3점)

① ○ : 헌법 제101조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② × : 헌법 제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 : 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 :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등을 관장한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49.

출제분야 : 공직선거법 / 영역 :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13. 정답 ② (3점)

①, ③, ④ ×

② ○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60.

출제분야 : 공직선거법 / 영역 : 평상시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

14. 정답 ③ (3점)

① × :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정 규격의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② × : 평상시에 자동 동보통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 : 평상시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확장장치 사용은 불가하다.

④ ×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56~57.

출제분야 : 공직선거법 / 영역 : 여론조사시 주요 준수사항

15. 정답 ③ (3점)

① ○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③ ×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④ ○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63.

출제분야 : 공직선거법 / 영역 : 주체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

16. 정답 ② (3점)

① ○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

② × ③ ○ :

| 주체  | 기간      | 금지 행위                                       |
|---|---------|---|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 상시      |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 선거 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 선거 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누구든지(제3자)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④ ○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죄의 주요사례이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64~65.

출제분야 : 공직윤리 / 영역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금지된 14개 행위

17. 정답 ① (3점)

Ⓐ ○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70~73.

출제분야 : 공직윤리 / 영역 : 금품등 수수금지 신고

18. 정답 ④ (3점)

① ○ : ② ○ :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③ ○ :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④ ×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80.

출제분야 : 공직윤리 / 영역 : 금품등 수수의 예외

19. 정답 ③ (3점)

① ○ : 금액상품권은 선물 증정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되나 물품교환상품권 등은 선물이 가능하다.

②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③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되 축의금 조의금(5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77~79.

출제분야 : 공직윤리 / 영역 : 이해충돌방지법상 5대 제한·금지 행위

20. 정답 ② (3점)

① ○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85~88.

출제분야 : 외교안보정책 / 영역 : 한미관계

21. 정답 ② (3점)

한미동맹은 기술·경제·우주·해양을 아우르는 21세기형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야 하며, 양국 국민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플러스 외교가 필요하다.

①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경제와 기술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방향과 배치된다.

③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우선론으로 동맹 현대화의 핵심 방향(다영역 협력, 상호 인식 제고)과는 초점이 다르다.

④의 MASGA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독자적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이 아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91~93.

출제분야 : 외교안보정책 / 영역 : 한중관계

22. 정답 ② (3점)

기본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태, 서해불법구조물 설치, 역사·문화 공정 논란 등을 반중감정 심화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면서, 정부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된 메시지와 외교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은 무역적자를 주된 원인으로 설정했으나 기본서가 지적하는 것은 안보·역사·주권 관련 이슈이다.

③은 중국 입장 수용론으로, 기본서가 비판하는 저자세 외교와 유사한 접근이다.

④는 반중감정을 언론의 산물로 축소하고 있으나, 기본서는 실질적 외교 사안(사드 보복, 영토·역사 침해 등)을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94~95.

출제분야 : 외교안보정책 / 영역 : 재외국민

23. 정답 ④ (3점)

우리나라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①, ②, ③ ×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99.

출제분야 : 외교안보정책 / 영역 : 외교안보정책의 미래

24. 정답 ③ (3점)

과학기술과 원자력은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며, 과학을 정치화하지 않고 한미 협력 등을 통해 원자력 전주기 활용 능력을 확보하는 등 국익 우선 외교가 필요하다.

①, ②, ④ ○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108~109.

출제분야 : 대북정책 / 영역 : 북한체제의 본질과 권력구조

25. 정답 ① (3점)

북한의 이념은 시대별로 사회주의(1948) → 주체사상(1972) → 김일성·김정일주의(2019)로 변모하였으나, 그 본질은 권력세습 정당화를 위한 이념 체계이다.

② 기본서에 적시된 북한체제의 본질은 ‘노동당 독재’, ‘유일영도체계’, ‘김정은 권력’이다.

③ 북한 헌법상 영도 주체가 조선노동당이지 국무위원회가 아니다

④ 북한이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권력자 개인의 통치 시스템이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114.

출제분야 : 대북정책 / 영역 : 6·25 전쟁의 전개과정과 주요 사건

26. 정답 ② (3점)

1950.9.15 인천상륙작전 후 9.28 서울 수복, 10.7 UN 총회에서 완전한 군사작전 승리 목표가 의결되고, 10.24 맥아더 장군 명령 하에 압록강 진격이 이루어졌다.

① 소련의 스탈린은 1953년 3월 사망하였고, 휴전협정은 1951년 개시되었으며 긴기간 이어지다 1953년 7월 체결되었다.

③ 전쟁 발발 전 스탈린과 김일성은 남침 계획을 합의하였으며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하였다.

④는 한국군은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115~117.

출제분야 : 대북정책 / 영역 : 역대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과 정책

27. 정답 ③ (3점)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있었던 일이다.

①, ②, ④ X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124.

출제분야 : 대북정책 / 영역 :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방향

28. 정답 ③ (3점)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해야한다.

①은 헌법 제3조·제4조의 정확한 내용이며, ②는 헌법 전문의 핵심을 올바르게 요약한 것이고, ④는 헌법 제5조의 내용과 부합한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122~125.

출제분야 : 과학기술정책 / 영역 : 산업혁명 단계별 특징

29. 정답 ① (3점)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이 전환점이 되어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었다.

②는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컴퓨터·반도체로 서술하고 있으나,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며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내연기관·철강·화학공업이다.

③은 3차 산업혁명을 전기 상용화와 대량생산 체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2차 산업혁명의 내용이다.

④는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영역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나, 기본서는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128~129.

출제분야 : 과학기술정책 / 영역 : AI 기술의 발전 단계

30. 정답 ② (3점)

현재의 AI는 약인공지능 단계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이며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번역, 챗GPT, 알파고, 자율주행차 등이 해당한다.

①은 현재를 강인공지능 단계로 기술하고 있으나, 강인공지능은 미래 단계이다.

③은 인간을 초월하는 AI를 강인공지능이라 하였으나, 기본서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AI는 초인공지능(먼 미래)이고 강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범용 AI(미래)이다.

④는 챗GPT와 자율주행차는 약인공지능의 사례이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141.

출제분야 : 과학기술정책 / 영역 : 각 정부별 경제발전 특징과 주요 성과/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심

31. 정답 ④ (3점)

과학기술처의 위상 강화는 전두환 정부, G7프로젝트는 노태우정부 시기의 성과이지,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성과는 벤처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배출, 스마트공장 1만 개 보급 목표 설정 등이다.

①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②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FTA 체결 확대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③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기본서 내용과 부합하게 서술하고 있다.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p. 135~136.

출제분야 : 과학기술정책 / 영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32. 정답 ③ (3점)

디지털 시대에는 정치적 소통의 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으므로, 보수정당도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유연한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①, ②, ④ ○

[출처] [기초자격평가 기본서] p. 139.